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73
----------	------

발의연월일 : 2024. 10. 28.

발 의 자 : 박수민 · 인요한 · 박준태
김상훈 · 송언석 · 이종배
박성훈 · 박정훈 · 박성민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

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민의원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44조의2”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에 관한 권리의 양도 특례) 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 환급을 받지 않은 자는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에 대한 충당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공제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의 양도에 대한 관리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 (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략)

3.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

-----.

1) (현행과 같음)

2) -----

이 조 및 제144조의2-----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

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에 관한 권리의 양도 특례) 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 환급을 받지 않은 자는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에 대한 충당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의 양도에 대한 관리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